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설치가 시급하다

박 영근 중앙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1. 서 론

미국의 환경보호단체 '월드워치'는 '98년 세계환경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지금처럼 확대와 성장으로 치닫는다면 자연의 지원체계는 크게 훼손되고 끝내는 경제성장마저 뒷걸음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자연자원의 소비가 극대화됨으로써 지난 50년간 나무의 소비량이 2배, 석유에너지 5배, 물고기 5배, 수자원 5배, 종이 6배, 공기와 수자원 오염 등이 7배씩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환경지표가 갈수록 부정적이라고 경고하면서 구체적 예로 삼림의 파괴, 습지지대의 축소, 토지의 훼손, 수자원의 고갈, 이산화탄소 증가와 고온화에 따른 이상기후, 일부 동식물의 멸종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에 인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서 세계적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 교수는 "우리는 또 인류사상 최초로 인류의 존재를 어지간하게나마 유지할 수 있기 위해 환경보호문제를 대면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우리의 정직하고 헌신적인 노력이 그 문제들을 해결 혹은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확신이 없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

면 인류에게는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 만큼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서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 파괴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나라는 한층 더 물자절약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동떨어져 있고, 각급 학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태며, 환경투자조차 부실하기 그지없을 뿐 아니라 효율성마저 잊고 있는 한심한 지경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터이다.

2. 갯벌을 살려야 한다

지난해 2월 2일은 세계 습지보호협약인 '람사 협약'의 회원국이 정한 제4회 '세계 습지의 날'이었다. 람사 협약 사무국은 이날을 맞아 호수, 갯벌, 늪 등 세계 습지의 절반 이상이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행위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이 사무국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습지를 제대로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나라 민간환경단체도 이 날을 맞이해서 대규모 간척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습지보전법 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하며, 공유수면 매립법을 폐지하고, 갯벌 등 연안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 생태계를 관리하는 권한을 환경부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정부 측에 새만금 지구, 영종도 신 공항 건설 등 현재 진행중인 간척 및 매립사업을 중단할 것과 강화도 남단 갯벌, 창원 주남 저수지, 순천 동천강 하구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조건을 가진 지역들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안습지는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다. 이 곳은 육지의 각종 폐기물이 분해되는 '천연 정화장'이다. 해안습지는 토사를 고정시켜 항구와 수로기능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각종 미생물과 어패류에게 산란과 서식장소를 제공하는 자연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생태계이다. 과학 전문지『네이처』에 따르면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1㏊당 9 천9백90 달러나 되어서 농경지의 1백 배이며, 산림의 20배이며, 바다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우리 나라 해안 간석지의 35%를 차지하는 서남해안 갯벌의 정화능력이 영국의 갯벌보다 15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우리 나라 전체 갯벌의 83%가 분포된 서해안은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 동부해안, 독일 북해연안,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데 서해안에 있는 간석지의 면적이 '70년 27만 4천 5백3㏊에서 '90년에는 7만 5천9백42㏊로 줄어들어 무려 72.3%의 갯벌이 사라졌다. 특히 전북지역은 '70년 2만 1천8백87㏊에서 '90년에는 7백46㏊만 남아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최근 빈발하는 여천공단과 광양제철소 주변 남해안 일대와 호수에서 나타나는 적조현상 그리고 연안어종이 멸종하고 철새의 서식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개발에 따른 습지의 파괴에서 비롯했다. 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간척사업과 습지를 파괴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

을 가져오는가는 시화지구 간척사업에서 이미 입증됐다. 그런데도 국민세금을 5천억 원씩이나 투입해 결국 여의도의 20배나 큰 '죽음의 호수'를 만든 시화지구와 같은 사례가 또 다른 지역들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아산호와 시화호에 이어 '새만금호'가 재앙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호의 면적(1백18㎢)은 시화호의 두 배에 이른다. 모두 33km의 방조제 가운데 지금까지 물막이가 된 새만금 방조제의 안쪽 바다에서는 벌써부터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유기물질의 농도가 높아져 바닷물 위에 거품이 이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물은 만경강과 동진강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등에서 1백60만 명이 쓴아내는 생활하수와 전주공단과 익산공단의 오수와 폐수 그리고 김제와 부안 등지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와 비료 등이 두 강을 통해 대량으로 흘러든다. '96년 7월 환경부의 발표를 보면, 새만금호에 물을 공급할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의 질소 농도는 '95년 연평균 각각 12.8mg/l과 4.6mg/l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무려 12배와 4배 이상 초과했다. 또 인의 농도도 만경강 하류가 '95년 연평균 0.6mg/l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6배나 넘어서 오염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철 교수(강원대, 환경공학)는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 해도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인 질소와 인은 처리과정에서 보통 20~30%밖에 제거되지 않는 데다, 호수를 씩게 하는 질소와 인은 하수처리장이 거의 가동되지 않는 홍수 때 대부분 호수로 유입된다."고 말한다. 농업용수가 되기는커녕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애물단지인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새만금 사업을 재검토해서 람사협약의 정신을 존중하여 새만금 갯벌을 습지보전지구로 정해야 한다. 이미 환경영향 평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새만금호의 물을 희석시킬 금강 강물은 이미

오염도가 크게 높아졌다. 농어촌진흥공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서 “금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새만금호의 수질을 농업용수로 적합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3ppm, 질소 1mg/l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크게 헛짚고 있다. 벌써부터 금강 하류에 있는 하구둑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96년에 연평균 4.6ppm, 질소는 3.3mg/l 나 되었다. 새만금호에 방류하게 될 경우 금강 강물은 희석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오염수’로 둔갑 할 공산이 크다.

우리 나라의 갯벌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천연자원이다. 특히 갯벌은 정화능력이 뛰어나며 동시에 생태계의 보고다. 갯벌은 천연자원으로서의 희귀성뿐만이 아니라 ‘미래가치’에 있어서도 엄청난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정성을 쏟아 가꾸고 있으며, 미국과 네덜란드는 이미 건설된 방조제를 없애고 갯벌을 복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우리는 잠시 빌린 환경을 잘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 기상투자는 40배의 반대급부를 되돌려준다는 게 선진국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렇다면 환경투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기초상식을 명심해야 한다.

3. ‘쿠리티바 선언’과 녹색댐(green dam)

지금 우리는 ‘댐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리산 산 청에 있는 고운동계곡,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진동계곡과 양양 남대천, 정선과 영월을 잇는 동강, 호남의 3대 절줄 가운데 하나인 탐진강 등 빼어난 자연경관이 댐 건설로 이른 시일 안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댐 천국인 우리 나라는 다목적 댐을 10개나 가지고 있다. 게다가 공사중인 용담·횡성·임계 댐 등 2001년까지 6개, 2011년까지 34개씩이나 더 지을 계획이다.

사정이 이렇게 극심한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교통부는 얼마전 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만 고시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산림법 등 19개 관련법의 인·허가를 면제해 주는 것을 뼈대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댐건설법을 꼼꼼히 살펴보면 오히려 이전의 법체계보다 환경문제는 물론 여론수렴에서도 뒷걸음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댐건설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특정다목적댐법’(이하 특다법)과 비교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지난 ‘66년 제정된 특다법은 건설부장관이 댐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댐건설법에는 의무조항이 없다. 댐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다. 특다법에서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의무조항은 댐건설법에서는 아예 없다.

얼마 전부터 정부는 국내에서 유일한 원시 자연환경인 강원도 인제군의 내린천에 팔당댐에 버금가는 저수량 2억 톤 규모의 다목적댐을 세울 계획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소양강댐 자체의 저수능력과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능력을 높이는 대책을 과학적으로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조댐을 짓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내린천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특정 야생동물인 꼬리치레 도롱뇽과 멸종위기에 직면한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59호)와 하늘다람쥐가 살고 있다. 한반도 고유종인 금강모치와 열목어 등 맑은 물에만 사는 냉수어족이 풍부하다. 또한 희귀종인 대륙목도리 담비와 큰오리 딱따구리와 검은줄박이 뼈꾸기도 살고 있다. 내린천 가까이에는 녹지자연도 9등급인 유명한 점봉산과 방태산 등이 있다. 이 산들은 한반도 유일의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다. 수령 2백 년 이상의 신갈나무와 금강소나무의 군락지 등이 그득하다. 문제는 방태산과 점봉산의 원시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생물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있다. 한마디로 우리 나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생태계의 값진 보고인 셈이다. 다행히도 내린 천 땜 건설이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로 일단 무산되었다. 하지만 건설 계획이 언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지 그 누구도 모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동강 영월댐이다. 얼마 전 교통부는 영월댐의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98미터 높이와 저수용량이 무려 7억 톤인 대형 댐의 건설을 그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강원도 정선·평창·영월군의 산악지대를 끼고 흐르는 동강은 천혜의 비경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다. 회귀 동식물과 석회암 동굴의 때묻지 않은 모습에 고인돌 등 선사 유적과 담배건조막 등 산간 오지의 삶의 자취가 배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댐 건설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 곳은 석회암 지하동굴과 편석지대가 많고 지진이 빈발하는 곳이며 폐광의 개도가 미로처럼 얹혀 있다. 따라서 대형 댐이 건설되면 수압을 못이긴 물줄기가 어느 산허리로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말이다. 그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새만금호의 평가가 그랬던 것처럼 '96년에 실시된 환경영향 평가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해 놓고 있다.

지난해 10월 건교위가 한국수자원공사를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변의 안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현섭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이 일대를 탐사한 결과 댐을 건설했을 때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동굴들이 192개나 발견됐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송 의원은 동굴 분포도를 제시하며 동굴의 길이

도 50m 이상이 모두 74개이며 폐광도 20여 개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수자공은 애초 이 지역 안의 동굴 수가 6개라고 밝혔다가 최근에 60여 개라고 수정했으며, 대부분이 10m 이하의 짧은 동굴로 위험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폐광은 한 곳도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술 더 떠서 수자공은 댐 구조물을 세우는 곳이 석회암이 아니라 사암과 세일층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되레 세일층이 지표에 드러나거나 물과 닿으면 풍화가 진행돼서 점토질 흙으로 변한다며 붕괴 위험을 경고하였다.

'63년에 건설된 그랜드캐니언 댐을 지난해 폭파하기로 한 미국 의회의 아무진 결정은 영월댐 건설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수백 개의 대형댐을 건설했으나 댐의 유지와 운영 그리고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결국 대형댐이 핵발전소와 같다고 판단한 미의회는 그랜드캐니언의 장엄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해 댐을 없애기로 했다.

그런데 염치를 내팽개친 일이 또 일어났다. 건교부가 동강댐 건설 예정지 상류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내놓았다. 건교부는 지난해 9월 정선군 일대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정해서 4조 6천억 원을 투입하는 개발사업을 2003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일이 아니다. 말밥에 오른 영월댐과 위락단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래를 보듬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97년 3월 브라질의 쿠리티바에서는 20여 개국의 댐 수몰지역 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댐의 환경과 문제점을 토의했다. 이들은 '쿠리티바 선언'을 통해 에너지와 물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댐건설이 악방의 감초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과 중국 등은 아직도 대형댐을 좋아하는 나라들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실질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녹색댐'이다. 세계 산림학계는 산림을 녹색댐으로 자리 매김한다. 숲이 물을 담수해서 내보내는 기능이 인공댐을 능가하는 점을 고려해서 붙인 이름이다. 인공댐은 수몰지구를 만들고, 기상조건을 바꾸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거리로 되었다. 따라서 인공댐보다는 녹색댐에 물을 담수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다. 독일, 스웨덴, 캐나다, 미국 등 삼림상(森林相)이 넓고 깊은 나라에서 아직도 많은 산림자원을 공들여 가꾸는 것은 녹색댐이 담수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댐을 건설하는 문제는 '국토의 합리적 관리'라는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개발을 빌미로 삼아 생태계를 파괴하고 현지민들을 삶의 덫밭에서 몰아내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간접살인행위'이기 때문이다. '96년에 강원도 고성에서 일어난 산불의 엄청난 피해에서 보았듯이 댐건설은 생태계에 산불을 놓는 행위이다.

4. '살아 있는 문화재'를 지키자

지난 '97년 KBS는 일요스페셜 '생물자원시대, 種이 유출되고 있다'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작물의 종자, 원예용 조경수, 화훼, 약용 식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생 생물종이 해외로 함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현재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한국의 자생식물은 2백여 종이나 된다. 그 중 95종은 새 품종으로 개발되어서 비싸게 팔리고 있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다. 세계적 회귀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산 미선나무는 15달러, 새 품종인 분홍꽃 미선나무는 40달러에 팔리고 있다. 산딸나무와 때죽나무가 미국의 정원수와 가로수로 각광받고 있

다. 북한이 원산지인 벌개회나무는 미스킴 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미국 관목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국립수목원에 근무하는 식물전문가 베리 잉거가 한국식물원정단을 만들어서 '89년까지 3차례나 우리 식물 9백여 종을 채집해 갔다. 세계적 제약회사인 듀폰이나 머크가 이 단체를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달갑지 않은 무단유출의 역사는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1890년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와서 한국 잔디의 우수성에 감탄했다. 그들은 잔디 씨앗을 어렵게 수집해서 본국으로 가져갔다. 물론 뉴욕에 있는 미국 최대 육종업체인 '피터 핸더슨'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량품종이 된 그 잔디는 미국의 수많은 테니스장과 각종 운동 경기장 및 많은 가정의 뜰에 심어졌다.

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토종인 앉은뱅이 밀은 키가 작아 강한 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으면서도 수확량이 높다. 불락 박사는 이 토종밀의 유전인자를 연구해서 전 세계에 보급시켜 굶주림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는 농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197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그 혼하던 앉은뱅이 밀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경하기가 힘들다.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이 어디 앉은뱅이 밀뿐이겠는가.

지구상엔 대략 3천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정지역이나 생물계 안에서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생물종을 뽑아서 '깃대'처럼 내세우자는 뜻에서 이를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라 부른다. '유엔환경계획'이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개척자라는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다. 백두산의 호랑이, 설악산의 반달곰, 홍천의 열목어, 태화강의 각시붕어, 무주 남대천의 반딧불이, 여수 오동도의 동백나무, 홍도의 풍란 등이 바로 깃대종의 대표적인 본보기다.

중앙일보가 '베달녹색연합'과 함께 벌이는 '깃대종 살리기' 운동이 벌써 2년째를 맞는다. 지역마다 새롭게 많

은 깃대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왕시는 대대적으로 올빼미를 보호하는 운동에 나섰고, 김천시는 은행나무, '민물고기보존협회'는 임진강의 황복살리기, 괴산에선 미선나무, 울산에선 각시봉어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내 마을과 내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올빼미 한 마리와 풀 한 포기라도 소중히 지켜 보자는 게 이 운동의 참뜻이다.

지금 지구촌을 생물 자원의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무장해제'를 당한 꼴이다. 토종 동식물은 환경 생태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지난 '92년 '세계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이후 전 세계가 경제적 자산의 차원에서 토종 동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토종을 보호·연구·육성하는 일은 단순히 농촌 살리기나 신토불이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21세기를 향한 생존전략으로 방향을 틀 때다.

최근 세계환경보전연맹(IUCN)은 지난 15년간 식물의 다양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27만 종의 식물 가운데에서 12.5%에 달하는 3만 3천7백98종이 사막화 현상, 화전경작, 화재,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말미암아 희귀종으로 되었으며, 자칫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보전감시센터(WCMC) 마크 콜린스 소장은 식물 멸종이 식량 및 의학적인 측면에서 인류에게 더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우리 토종은 '살아 있는 우리 문화재'이다. 따라서 그것을 발굴해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며, 동시에 세계 속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뽐내는 일임에 틀림없다. 현재 우리 국토에 있는 생물 자원은 3만 3천여 종에 이른다. 다행하게도 지난해 순수 민간단체인 '한국토종연구회'가 창립되었다. 뒤늦게나마 토종 연구가와 애호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리 생물 자원의 기초 토대부터 연구하는 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수천 년간 살아온 토종들이 사라져 가는 것은 우리가 엮고 추슬러 온 삶의 죽적을 지원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 정부나 기업들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생물종을 연구하는 자연사 박물관이나 연구소를 세우는 데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생물종 지키기'와 '깃대종 살리기'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널리 펼쳐야 한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IMF 한파보다 더 무서운 '환경 토네이도'가 앞으로 우리 나라에 불어닥칠 조짐이 높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다. 에너지 자급도가 고작 2.5%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라가 21세기에는 세계적 환경변화로 빚어지는 에너지 및 식량부족으로 제2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엉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나라에 제3의 오일쇼크, 이상기후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의 급등, 기후변화협약에의 가입 압박 등이 가해지면 충격의 강도는 세계 평균의 2~3배 이상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네 환경정책은 힘을 받고 있지 못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엮어낼 주체도 결집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팔당호를 비롯한 전 국토의 많은 강들이 이대로 방치하면 수자원 가치를 잃을 것이고, 자동차의 수요를 조절하지 못하면 공기오염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크게 파괴되어서 인체에 치명적일 터이고, 그린벨트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재앙이 도래할 게 뻔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물과 공기와 땅이 급격하게 오염되고 있는 마당에 생존전략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요구된다.

5. 결 론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사회지도자, 공무

원, 군인 등에게 수시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환경교육을 반드시 설정해서 협동과정을 통한 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들은 전시 위주의 죽은 환경교육을 지양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환경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으며, 지역환경의 중요성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해서 환경실천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짜야할 것이다. 굽은 환경교육을 곧게 펴서 환경의 가치를 학생들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환경운동의 텃밭을 일구어낼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엔트로피』와 『노동의 종말』로 잘 알려진 제레미 리프킨은 얼마전 그의 아내와 함께 쓴 『녹색에 투표하기』(Voting Green)라는 책을 출간했다. 녹색만이 진정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정책비전을 내놓고 있는 이 책은, 녹색을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정치 문화 경제 인프라를 다시 구상하기 위한 핵심단

어로 깔고 있다. 이들 부부는 첨단만을 좇는 과학과 기술을 녹색화하고, 정치와 경제를 녹색화해서 발전개념을 녹색화로 다시 추스르지 않는 한, 지구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

박영근

서울대 불어불문학과와 같은 대학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74년부터 '78년까지 육사 교수부 외국어과 그리고 '79년부터 '81년까지 전남대 문리과대학에 재직했다. '82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에 있으며, '95년부터 「교수신문」 편집주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벌자크의 연구』가 있고, 역서로는 벌자크의 『고리오 영감』 등이 있다. 논문은 「인간회극에 나타난 정신과 물질의 상관 관계」, 「Le Grand Meaulnes에 나타난 안정과 불안정의 의미」 등 다수가 있다.